

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Right to Health News at a Glance

2014년 4월 5주차(2014.4.24-4.30)

요약(Summary)

○ 주요뉴스

1. 현재, '의료기관 당연지정제 헌법소원' 기각(4/26)
2. 복지부,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회의 연기(4/24)

○ 국내정책

- 장기입원환자 본인부담률 인상 추진(4/28)
- 발달장애인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4/29)

- 복지부·의협, 의정협의 2차 회의 미뤄져 (4/25)

- '의료민영화 반대 전공의 모임' 발족(4/23)
- 전공의협회장 “의료민영화 반대하지 않는다”(4/29)

○ 의료산업

- 정선의료원, 하반기 착공 전망(4/28)
- 차병원, 청라에 의료복합타운 조성(4/28)
- 삼성바이오로직스, 7300억 투자 공장 증설 (4/28)
- 서울대 의대-헬스커넥트 업무협약체결(4/28)

- 노환규 전 회장 '탄핵 무효' 가처분신청 접수 (4/29)

○ 기타뉴스

-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시설 종합평가 결과 발표(4/28)

○ 관련단체 동향

- 치협 대의원 총회 '치과전문의 소수제' 논란 (4/29)
- 전공의협회장 “의료민영화 반대하지 않는다”(4/25)

○ 발간자료



1. 현재, '의료기관 당연지정제 헌법소원' 기각(4/26)

의료기관이 당연히 국민건강보험 요양기관이 되도록 한 의료기관 당연지정제가 헌법에 벗어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이 모씨 등 의사 2명이 지난 2012년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당연히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기관이 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이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을 기각했다. 이번 헌법소원은 심판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2조 제1항 전문 중 제1호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다. 현재는 국민건강보험법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의료기관 개설자의 직업수행과 자유와 평등권, 의료소비자로서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선고했다.

현재는 앞서 제40조 제1항의 요양기관 강제지정제가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 의료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면서 요양기관 강제지정제가 의료보장체계의 기능 확보 및 국민의 의료보험수급권 보장이라는 정당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또 요양기관 계약지정제를 선택하는 경우 또는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를 선택하면서도 예외를 허용해 일부 의료기관을 요양기관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보험의 안정적인 확보가 곤란하게 되는 등 의료보장체계의 원활한 기능 확보가 달성되기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아래서도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고려하고 존중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등 최소침해원칙과 법익균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요양기관 강제지정제가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요양급여비용 산정과 비급여 의료행위의 가능성 등을 통해 의료기관 사이의 실질적인 차이가 반영됨으로써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다르게 취급되고 있고, 의료소비자가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비급여 의료행위를 선택할 수도 있으므로, 요양기관 강제지정제가 의료인의 평등권과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선례 이후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른바 임의 비급여 의료행위가 전면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종전의 판례를 변경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임의 비급여 의료행위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취지로 판시했다"면서 의료기관 개설자와 의료소비자의 의료행위 선택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게 됐고 요양급여대상과 비급여대상 사이의 조정절차, 요양급여행위 상대가치점수 등에 대한 조정절차, 새로운 의료행위 등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절차 등 요양급여 기준과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대법원의 판례 변경 등으로 의료기관 개설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의료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등에 대한 제한 정도가 다소 완화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 의료소비자로서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¹⁾

2. 복지부,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회의 연기(4/24)

세월호 사고로 인해 어수선한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했던 의료법인 부대사업 관련 회의 개최가 연기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당초 오늘(24일) 오후 4시 개최하려던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방안 실무회의 일정이 연기됐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오늘 정오 경 주무과인 보건의료정책과로부터 시기가 적절치 않다면서 회의 연기를 통보 받았다"라며 "차후 회의를 언제 할 지는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전국이 세월호 사고를 애도하는 분위기와 함께 참여 예정이던 의약단체들이 불참을 통보함에 따라 복지부가 회의 연기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당초 참여 대상이던 보건의료 6개 단체들 중 대한병원협회를 제외한 5개 단체들이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²⁾

국내 정책

1. 장기입원환자 본인부담률 인상 추진(4/28)

이르면 9월부터 병원에 한 달 이상 입원하는 장기입원자의 입원비 본인부담률이 지금의 3배 수준으로 높아진다. 정부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항목이 올 하반기부터 건강보험을 통한 급여로 전환될 경우 불필요한 장기입원 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염려해 이 같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다만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중환자는 지금의 입원비 부담률이 적용되도록 예외 규정이 마련될 전망이다.

27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장기입원 본인부담률 상향 조정 대책'을 포함한 3대비급여 후속조치를 마련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입원 기간 1~15일까지는 본인부담률을 현재 수준(약 25% 내외)으로 적용하지만 16~30일은 병원비 본인부담률을 50%로 인상하고 31일부터는 80%로 올리는 '계단식 상향'이 검토되고 있다. 즉 환자가 병원에 장기입원하면 16~30일까지는 현재의 2배, 31일 이후부터는 현재의 3배가 넘는 입원 부담금을 지불하게 되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달 발표한 '2013년도 건강보험주요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입원 또는 내원한 환자의 1인당 진료비는 5만2596원이었으며 이 중 3만9352원(74.8%)이 건보를 통한 급여로 충당됐다. 입·내원 기간과 관계없이 병원비 중 약 25%만 환자가 부담한 셈이다. 하지만 한 달 이상 입원하는 환자의 병원비에 무조건 동일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면 '비급여의 급여화로 환자들이 값싼 의료 서비스를 남용해서 받을 여지가 생긴다. 이에 정부는 당초 내년 하반기에 추진하려던 입원비 본인부담률 상향 조정 계획을 1년가량 앞당겨 조기 완료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막으려면 결국 장기입원자 입원비 본인부담률 인상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연내 제도 시행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³⁾

[보도해명] 한달이상 입원때 본인부담금 인상, 결정된 바 없다

보건복지부는 28일자 매일경제신문의 “복지부, 한달이상 입원때 본인부담금 3배 ↑” 제하 기사 관련 “이는 아직 전혀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장기입원 환자의 입원비 본인부담 인상은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제도 개선시 야기될 수 있는 상급종합병원의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방지하기 위해 검토 중인 사항으로 금년 2월 발표한 3대 비급여 개선계획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아직 전혀 결정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사는 이날 금년 9월부터 병원에 한 달 이상 입원하는 장기 입원환자의 입원비 본인부담률이 지금의 3배 수준으로 높아질 것이라며 1~15일 입원 본인부담률은 현재 수준(약 25% 내외)이나 16~30일은 50%, 31일부터는 80%로 인상하는 계단식 상향 조정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했다.⁴⁾

2. 발달장애인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4/29)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장애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발달장애인 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장애인과 보호자를 지원하기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발달장애인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12년 처음 발의된 발달장애인법은 발달장애인의 구체적인 범위와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장애인과 가족, 보호자를 위한 각종 지원체계의 근거를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등록된 발달장애인은 2012년 기준 지적장애인 17만3천257명, 자폐성장장애인 1만6천906명 등 모두 19만163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약 7.6%에 해당한다.

발달장애인법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목적으로 공공후견인서비스를 지원하고, 발달장애인 전담조사제를 도입해 형사·사법절차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했다. 또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유기·학대·성폭력 등의 범죄를 막고자 관련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사회복지사·교사 등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범죄 사실을 알게 되면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했으며,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한 조기 정밀진단비용과 재활·직업훈련·여가활동 등도 지원하도록 했다. 부모 등 보호자에 대해서도 상담과 정보제공은 물론 휴식 지원 등을 통해 돌봄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아울러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거점으로 중앙과 지역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이번 법안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⁵⁾

1. 정선의료원, 하반기 착공 전망(4/28)

타당성 논란을 빚어온 강원 정선군 의료원 조성공사가 이르면 하반기 중 착공될 전망이다. 28일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신만희)는 지난해 실시된 정선군의료원 신축공사 설계공모 당선작 '치유의 숲' 기본설계에 대한 보건복지부 설계심의회가 통과돼 5월중 최종설계가 완료되면 하반기 착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원도개발공사는 기본설계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정선군민과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설계에 가정의학과와 내과계 소화기·호흡기 내과 개설을 반영기로 했다.

정선군의료원은 총 사업비 293억원을 들여 정선군 사북읍 구 동원탄좌 부지 1만7340㎡에 지하1층 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되며 오는 2016년 6월 준공되면 부족한 정선 고한사북지역의 의료환경 개선에 매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⁶⁾

2. 차병원, 청라에 의료복합타운 조성(4/28)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진료 과목별 전문병원이 집적한 미래형 의료복합타운이 들어설 전망이다. 인천시는 28일 차병원그룹 계열사인 차헬스케어와 청라에 의료복합타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차병원그룹은 2018년까지 1조5000억원을 들여 청라 신세계복합쇼핑몰 부지 옆 투자유치용지(약 26만㎡)에 의료복합타운을 짓는다. 의료복합타운에는 국내 최초로 진료 과목별 전문병원이 건립되고 교육·임상연구시설, 문화·체험공간이 들어설 예정이다.

차병원그룹은 사전 의료서비스(pre-care)와 사후 의료서비스(post-care)를 포함한 생애 전주기적 의료서비스(total life-care) 제공으로 청라 의료복합타운을 특화한다는 계획이다.

차병원그룹은 3개월 안에 병상 규모 등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인천시에 제출하고, 인천시는 의료복합타운 용도에 맞게 사업 부지 개발·실시계획을 지정하기로 했다.

차헬스케어 윤경욱 대표는 “진료과목별 전문병원 건립과 생애 전주기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복합단지 모델이 미래 병원사업의 주요 트렌드가 될 것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⁷⁾

3. 삼성바이오로직스, 7300억 투자 공장 증설(4/28)

삼성그룹이 미래 신먹거리인 바이오의약품분야에서 세계적인 의약품 위탁 생산 전문업체를 목표로 7억 달러(약 7260억원)를 투자해 생산 공장 증설에 나선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내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인천 송도에 7억달러를 들여 15만 리터 규모 추가 공장을 짓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삼성이 신성장동력으로 바이오시밀러 등 바이오의약품분야를 선택한 후 성장 전략을 고민한 결과로, 세계적인 위탁 생산 업체인 대만 폭스콘(Foxconn)과 TSMC와 같은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을 다

집한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공장 증설을 완료할 경우 1공장과 추가 공장을 합쳐 총 18만 리터의 생산량을 보유하게 된다. 이는 삼성이 스위스 룬자(24만 리터)와 독일 베링거인겔하임(22만 리터)의 뒤를 바짝 쫓아 단번에 세계 3위 의약품 위탁생산 업체로 부상하게 됨을 뜻한다.

삼성 관계자는 "의약품을 만들어 미국·유럽 시장에서 마케팅을 하려면 엄청난 비용과 노력이 들어간다"며 "우리는 폭스콘이나 TSMC처럼 마케팅 활동을 하지 않고 외국 제약 고객사를 대상으로 주문받아 제품을 만드는 비즈니스 모델로 수익 창출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스위스 룬그룹, 미국 BMS 등과 위탁생산 계약 체결을 완료했으며 올해 BMS와 의약품 원료, 완제품 제조 계약을 추가로 맺었다.⁸⁾

4. 서울대 의대-헬스커넥트 업무협약체결(4/28)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은 최근 건강정보 앱 개발기업인 헬스커넥트와 지난 18일 업무협조약정(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두 기관은 헬스케어 사회관계망서비스 프로그램인 '헬스온스토리' 콘텐츠를 공동개발하고 홍보해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인식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건강문화와 건강공동체 조성을 위한 연구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대 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의대 부설기관인 국민건강지식센터 사업을 실질적으로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건강지식센터는 국민들에게 미래지향적인 건강개념을 정립하고 의료정보의 홍수 속에서 학술적 근거에 바탕을 둔 정확한 건강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7월 설립됐다.

강대희 서울대 의과대학 학장은 "국민건강지식센터의 신뢰성 높은 건강정보를 바탕으로 헬스온스토리 앱의 '의사와 친구 맺기', '상황인식 기술' 등 기능을 활용해 인류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국민건강 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헬스온스토리' 앱은 현재 구글플레이, 마켓 등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⁹⁾

관련단체 동향

1. 치협 대의원 총회 '치과전문의 소수제' 논란(4/29)

대한치과의사협회 제63회 대의원총회에서 결정된 '치과전문의 소수제'를 두고, 치과계 내부에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확대 방안과 소수안이 맞붙은 결과, 소수제가 채택됐지만 이익단체(치협)의 영향력을 이대로 뒤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논란의 시작은 지난 1962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의료계와 마찬가지로 전문의제도 도입이 시도

됐지만, 비수련 치과의사들의 반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이후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치과의사들이 전문의 취득기회가 없는 것에 대해 1996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년이 지난 1998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승소 판결을 얻어냈지만, 경과규정은 배재됐다. 기존 수련자들의 응시자격은 여전히 박탈된 상황인 것이다.

현재 2008년부터 매년 270여 명의 치과전문의가 배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치과의사(약 3만명) 중 5.6%가 전문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

이번 대의원총회에서는 3가지 선택권이 상정됐다. 1안은 ▲임의수련자 응시기회 부여 ▲전속지도전문의 전문의 자격 또는 응시 기회 부여 ▲전문의제도 갱신제 도입 등이다. 여기에 ▲전문과목 신설을 추구한 선택권이 2안이었다. 소수정예 원칙인 3안은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강화 ▲전문의 자격시험 강화 ▲전문의 자격갱신제도 도입 ▲의료법 77조3항 효력강화 ▲1차 임상의 양성과정 제도화 ▲전속지도전문의 자격 문제 해결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었다.

최종적으로 1안과 2안을 합친 '확대안'과 3안 '소수안'이 후보군으로 압축됐다. 투표 결과 전체 166표 중 91명의 지지를 얻은 소수안이 73명의 지지를 얻은 확대안을 눌렀다. 기권은 2표가 나왔다.

이번 결과에 대해 대한교정학회 전문의대책위원회 등 반대 측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또다시 무시됐다"며 "국민의 건강권을 기만하는 내용들이 대거 총회 석상에서 채택됐다"고 주장했다.

이번 대의원총회 결정에 대한 찬성 측 논리도 만만치 않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등 찬성 측은 표결에 앞서 소수전문의제 채택을 위한 대의원 설득에 적극적으로 나선 바 있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는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강화와 일차임상의양성과정 대폭 확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이렇게 될 경우 어느 정도 숙련된 페이닥터를 필요로 하는 기존 개원의들에게도, 국민 모두에게도 win-win이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5월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신임 최남섭 회장은 전문의 표방금지에 찬성하고, 원칙적으로 소수정예제가 지켜질 수 있는지 원점부터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차기 집행부가 치과전문의제도를 어떻게 정착시켜 나갈지 임기 시작 전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¹⁰⁾

2. 전공의협회장 "의료민영화 반대하지 않는다"(4/25)

서울시의회는 지난 24일 제2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립대에 의과대학을 설치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통과시켰다고 25일 밝혔다. 표결에선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의견이 50표로 반대(14표)보다 많았다. 기권은 3표였다.

서울시의회는 앞으로 시립대 의대설립 촉구 결의안을 국회의장과 보건복지부 장관, 교육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시장, 시립대 총장 등에 보낼 예정이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인호(새정치민주연합) 시의회 재정경제위원장은 "양질의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13개 시립병원과 연계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공공의료의 질을 높이고자 건의안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가 반대 견해를 내놓은데다 보건복지부에서도 현재 의료기관이 부족하진 않은 것으로 보고 있어 당장 시립대 의대 설립이 쉽진 않을 전망이다. 실제 1997년 가천의대와 성균관대 의대

를 마지막으로 의과대학이 신설된 사례가 없다.

김용석(새누리당) 시의원도 "우리나라에서 현재 의과대학이 추가로 필요한지 잘 모르겠다. 국토균형발전 때문에라도 신설 의대는 의료환경이 열악한 지방 곳곳에 설치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¹¹⁾

3. 복지부-의협, 의정협의 2차 회의 미뤄져(4/25)

의정협의 추진단 회의가 세월호 침몰사건과 대한의사협회 내부 문제로 인해 연기됐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5일 의정협의 이행추진단 제2차 회의가 2주 가량 연기돼 오는 5월9일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지난 11일 '의정협의 이행추진단' 제1차 회의를 개최해 의정협의결과와 이행계획 및 추진방안을 논의하며 제2차 추진단 회의 개최를 25일로 예정했었다.

당시 1차 회의에서 의정협의 결과에 따른 각 과제에 대해 복지부와 의협의 소관부서를 정했고 각 부서별로 협의해 세부이행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의협은 내부에서 노환규 회장이 불신임 되는 등 대의원과 집행부간의 갈등이 표면화 됐고 복지부는 세월호 침몰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몰두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관계 담당자가 사고현장에 파견나가 자리를 비운 상태이다"고 전했다.

정부는 의정협의 결과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 나간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격주 단위로 추진단 회의를 개최해 각 과제별 이행상황을 공유하기로 함에 따라 점검차원에서 2차 회의를 가지려고 했던 것이다. 의정협의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부서별로 의정협의 이행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협의 이행추진단은 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장 ▲보험정책과장 ▲보건의료제도개선팀장으로 구성돼 있고 의협 측은 ▲상근부회장 ▲총무이사 ▲기획이사 ▲보험이사가 포함돼 있다.¹²⁾

4. '의료민영화 반대 전공의 모임' 발족(4/23)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전공의 모임이 5개 주요 대학병원,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참여한 가운데 21일 발족했다. 이날 발족식에서 윤정원 전공의(세브란스병원 전공의 4년차)가 대표로 선임됐다.

전공의 모임은 "정부가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민영화를 막기 위해 전공의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26일 예정된 대한전공의협의회 임시 대의원총회에 참석해 의료영리화 대응 방안 마련 목소리를 높일 계획이다.¹³⁾

5. 전공의협의회장 "의료민영화 반대하지 않는다"(4/29)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의료민영화 찬성 의견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진행된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의 제17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장성인 회장이 개인적으로 의료민영화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장성인 회장은 "모든 전공의가 의료민영화에 반대하고 있다는 생각은 한쪽의 입장만을 듣는 것과 마찬가지로"라며 "본인은 의료민영화에 대해 반대하지 않았기에 비대위를 맡지 않았으며 의견을 밝힐 수 없었다"고 밝혔다.

장 회장의 발언에 전의협 회원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회의에 참석한 모 전공의는 "대전협은 성

명서를 통해 의료민영화 반대입장을 밝혔고, 지난 3월 10일 파업동참이 의료민영화 반대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회장의 개인 의견으로 인해 의료민영화 반대를 위한 안전이 상정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이어졌다. 이에 정 회장은 “전공의의 의료민영화에 대한 생각은 다양하고, 그것이 국민들에게 악영향을 미칠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자신의 의견을 재강조했다.¹⁴⁾

6. 노환규 전 회장 '탄핵 무효' 가처분신청 접수(4/29)

노환규 전 의협회장이 자신을 탄핵한 대의원총회 결의가 무효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노 전회장은 오늘(2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임시대의원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접수했다. '임총결의 무효확인소송'도 함께 냈다. 노 회장의 소송대리인 유지담 변호사(법무법인 케이씨엘)는 이날 오후 3시경 법원에 관련 서류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처분신청은 지난 4월 19일 의협 임시 대의원총회 결의 내용이 무효하므로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것이 핵심이다. 당시 임총은 노 전회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을 표결에 붙여 재석 대의원 178명 중 찬성 136명(76.4%), 반대 40명, 기권 2명으로 가결시켰다. 불신임안 통과 즉시 노 전회장은 회장 직위를 상실했다.

노 전회장은 가처분신청서에서 △명예훼손 △품위손상 △부적절한 언행으로 내부분열 야기 △투쟁과 협상의 실패에 대한 책임 △정관위반 등 자신의 불신임 사유로 지적된 사항들을 적극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회장이 자신의 불신임을 받아들이지 않고 법적 대응에 나섬으로써 의협의 내부 상황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특히 의협은 이미 협회장 보궐선거 일정에 들어간 상황이어서, 법원의 가처분신청 수용 시점에 따라 적지 않은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 전회장은 방상혁·임병석 전 상임이사를 불신임한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이번주 내로 법원에 접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¹⁵⁾

기타 뉴스

1.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시설 종합평가 결과 발표(4/28)

치매 등 노인성 질환자들이 생활하는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질이 2년 전 평가 때보다 오히려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욕창 방지나 식단처럼 입소환자들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서비스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질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전국의 장기요양기관 중 입소시설 3423곳에 대해 급여내용과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평균점수가 70.5점으로 2011년에 비해 5.3점 하락했다고 27일 밝혔다.

평가는 환경·안전, 기관운영 등 5개 영역별로 2년마다 이뤄진다. 이 중 환경·안전 분야는 평균 84.5점으로 2년 전(81.5점)에 비해 유일하게 점수가 올랐다. 휠체어가 오갈 수 있도록 문턱을 제거하고 미끄

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안전과 관련한 환경 개선은 비교적 충실히 이뤄졌다는 뜻이다.

반면 삶의 질에 직결되는 급여제공과정 분야는 73.6점에서 70.1점으로 평균점수가 하락했다. 하루 종일 누워 있는 와상환자들에게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자주 자세를 바꿔준다든지, 환자에 따라 적절한 식단을 제공하거나, 치매환자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는 많은 기관이 소홀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요양보호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인력 배치 및 처우 분야(기관운영)의 평균 점수도 65.0점으로 2011년(73.3점)보다 크게 하락했다.

복지부는 평가점수를 토대로 A~E등급을 구분한 뒤 평가결과를 28일부터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공개한다. 환자 및 가족들이 등급을 확인해 원하는 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상대평가 방식이어서 등급만으로는 질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양호'로 분류되는 C등급은 75점, '보통'인 D등급은 60점만 넘으면 받을 수 있다.¹⁶⁾

발간 자료

1. 정부기관

- ① 보건복지부
-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 ③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

2. 국책연구소

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포럼 2014년 04월 통권 제210호〉: '우리나라 건강 불평등 연구와 정책의 과제', '미국의 건강 불평등 지표와 시사점', '우리나라의 건강 형평성: 현황과 과제', '위험사회에 대한 국민의식: 한국 사회위험지수 분석', '대형 상급종합병원 환지출립 완화정책의 현황과 방향', '호주의 Life Saving Drugs Program 운영현황과 시사점' 등

<https://www.kihasa.re.kr/html/jsp/publication/periodical/forum/list.jsp>

· 〈보건·복지 Issue & Focus 2014년 04월 237호〉: '중증질환자의 의료이용 및 의료비 지출이 주는 시사점: 지역과 개인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중심으로', '사회보장 장기재정추계와 정책과제' 등

<https://www.kihasa.re.kr/html/jsp/publication/periodical/focus/list.jsp>

②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주간 보건산업 동향(Vol.105, 4/28): 한-미 FTA 발효후 對미국 보건산업별수출입 현황, 한-미 FTA 발효후 對미국 주요 보건산업 품목 수출입 현황

http://khiss.go.kr/board/bbs_read.jsp?tname=MINBOARD358&bbsid=B305&cat_bbsid=&bbs_seq=112&jkey=&jword=&pg=1&htxt_code=133938779978134299384428462&wj_vcs=&reverseNum=111&forwardNum=1

- 글로벌 보건산업 동향(Vol.105, 4/25): ‘미국 정부의 헬스케어 지출 확대가 예산에 미치는 영향’, ‘유럽의회, 임상시험 투명성 강화 법안 채택’, ‘미국 24개주 검찰청장, 구글에 불법 의약품 유통 방지책 압박’, ‘일본 의료계, 건강 ‘정상’ 판단 기준 완화’ 등

http://khiss.go.kr/board/bbs_read.jsp?tname=MINBOARD358&bbsid=B306&cat_bbsid=&bbs_seq=106&jkey=&jword=&pg=1&htxt_code=135209061557816711589641157822618&wj_vcs=&reverseNum=104&forwardNum=1

- ‘한국의료기관 미국 진출에 대한 전략적 고찰’(4/28)

http://info.khidi.or.kr/www/khidipob_report_view.jsp?bbs=401&seq=6671&pg=1

- 월간브리프 ‘의료기기 주요품목 시장분석 Vol.23 - 스텐트’(4/29)

http://info.khidi.or.kr/www/khidipob_trend_view.jsp?bbs=404&seq=6672&pg=1

3. 민간기관

① 한국병원경영연구원

② 의료정책연구소

③ 보험연구원

- ‘민영의료보험 가입자의 건강상태 및 건강생활습관과 시사점’(4/21)

http://www.kiri.or.kr/html/periodList.asp?mStep=05&part=period&kc_list_num=9053&Cate1_num=152&Cate2_num=153&ContentCate=&search_key=0&search=&Cur_Page=1&v=1#s

- ‘소득수준을 고려한 개인연금 세제 효율화방안’(4/3)

http://www.kiri.or.kr/html/reportList.asp?kc_list_num=9044&mStep=03&part=report&Cate1_num=1&Cate2_num=5&v=1

④ 건강복지정책연구원

⑤ 한국헬스협회

-
- 1) '헌재, '의료기관 당연지정제 헌법소원' 기각', 2014.4.26., <국민일보>
 - 2) '복지부,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회의 연기', 2014.4.24., <메디파나뉴스>
 - 3) '복지부, 한달이상 입원때 본인부담금 3배↑', 2014.4.28., <매일경제>
 - 4) '한달이상 입원때 본인부담금 인상, 결정된 바 없다', 2014.4.28.,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5) '공공후견인서비스 등 발달장애인 지원 강화된다', 2014.4.29., <연합뉴스>
 - 6) '정선의료원, 하반기 착공 전망', 2014.4.28., <뉴스시스>
 - 7) '차병원, 청라에 의료복합타운 조성', 2014.4.28., <한겨레>
 - 8) '삼성바이오로직스, 7300억 투자 공장 증설', 2014.4.28. <데일리메디>
 - 9) '서울대 의대-헬스케어 업무협약체결', 2014.4.28., <민중의소리>
 - 10) "치과전문의 소수제" 논란 파문 확산', 2014.4.29., <데일리메디>
 - 11) '서울시의회, 서울시립대 의대 설립 건의안 통과', 2014.4.25., <연합뉴스>
 - 12) '복지부·의협, 의정협의 2차 회의 미뤄져', 2014.4.25., <메디컬투데이>
 - 13) "의료민영화 반대 전공의 모임" 발족', 2014.4.23., <메디컬투데이>
 - 14) '전공의협회장 "의료민영화 반대하지 않는다"', 2014.4.29., <메디컬투데이>
 - 15) '노환규 전 회장 '탄핵 무효' 가처분신청 접수', 2014.4.29., <의협신문>
 - 16) '질 나빠진 노인장기요양시설... 평가점수 2년 전보다 5.3점↓', 2014.4.28., <국민일보>